

하남시 환경하남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 남 시
[환 경 보 호 과]

하남시 환경하남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4. 10.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개정이유

- 가.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하남시 환경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 되었으나,
- 나.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지속가능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하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개정
- 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한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및 안 제3조)
- 다. 협의회 구성에서 위촉대상자를 세분화하고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문으로 정비(안 제7조)
- 라. 위원의 위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촉사유조항 신설(안 제8조)
- 마. 협의회 기구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 및 제10조)
- 바. 협의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
- 사. 협의회 운영재원 조항을 신설하고, 지원방법과 정산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50조
-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제10조, 제22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가. 예고기간 : 2014년 9월 16일 ~ 10월 6일(20일간)
- 나. 의견내용 : 덧붙임

8. 부서협의 결과

- 가. 협의기간 : 2014년 9월 16일 ~ 10월 6일(20일간)
- 나. 의견내용 : 의견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환경국 환경정책과

하남시 환경하남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환경하남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방의제21”이란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에 따라 지역의 주민·기업·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민·기업·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사업자의 책무)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제6조(기능)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와 시민, 기업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한 하남 발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추진
2. 지속가능한 하남 발전을 위하여 주민·기업·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
3. 시장이 지속가능한 하남 발전을 위하여 자문하는 사항
4.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과 협의회부회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시 담당부서의 장
 2. 하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지역주민, 여성, 청소년, 노동계, 상공인, 농업인 등 각계 인사 및 각 분야의 전문가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협의회의 기구)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2.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3. 그 밖에 협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4장 협의회 운영

제11조(총회)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무를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시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3. 협의회장이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 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의 관계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시 환경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사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지원 등

제17조(재원) ① 협의회는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남시의 보조금
2. 주민의 후원금
3. 협의회 회원의 후원금

② 협의회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
2. 협의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9조(지원방법 및 정산)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및 정산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한 하남 발전을 위한 시정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하남시환경하남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하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부서명		환경보호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환경보호과장 김동화
	팀장 직위·성명	환경관리팀장 김현아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현아 (790-5093)

《 관계법령 발췌서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 발전을 말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3]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거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 ④등록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항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 입법예고 의견 검토보고 》

□ 입법예고

- 기 간 : 2014. 9. 16. ~ 10. 6. 【20일간】
- 관련조례 : 하남시 환경하남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
부개정조례

□ 기간중 의견 제출

- 의견제출자 : 박정학 (하남시 감북동 273-2)
- 의견제출일 : 2014. 9. 19
- 의견내용
 - 제7조(구성) : 추가
 1. 정치적 목적의 개인, 단체, 기관 또는 종북, 북한추종세력은 배제
 2. 이념편향적 개인 및 단체출신 배제
 3. 시민단체 및 시민단체가입자 배제
 - 제8조(위원의 해촉) : 추가
 1. 예산전용, 횡령 자
 2. 국가정책에 반대 정치 목적시위 참여 자
 3. 구속, 불구속 수사 자
 4. 사회적 물의를일으킨 자
 5. 정당 및 시민단체 가입 자등은 즉시 직권으로 해촉
 - 제19조(지원방법 및 정산) : 수정
 1. 정산은 일일정산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담당공무원은 이를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주간단위로 14일간 시홈페이지에 고시공고란에 주민열람공고한다
 - 제21조(감독) : 수정
 1. 업무를 필히 보고해야한다 그리고 소속 공무원은 그 업무를 필히 확인
검사해야한다

□ 검토결과 : 원안 유지 타당

- 제7조 협의회 구성은 3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조례 기본이념 및 목적을 바탕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항으로 정치적 목적,이념등 단체 및 기관 배제 세부적 명시는 조례 취지에 적합치 않음

【 제7조(구성) 】

- 3. 지역주민, 여성, 청소년, 노동계, 상공인, 농업인 등 각계 인사 및 각 분야의 전문가

- 제8조 위원회 해촉은 조례(안) 3, 4호에 포괄적으로 해당되므로 세부명시는 불필요함

【 제8조(위원의 해촉) 】

- 3. 위원이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9조 지원방법 및 정산과 관련 일일결산 및 주간단위 고시공고는 현 업무체계상 불가하며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야 함
- 제21조 감독과 관련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당연히 감독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있음